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김성환 “재생에너지·원전 믹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워크

권오을 후보, 과거 보수정당 활동 국민의힘 ‘철새 정치인’ 비판

임광현 후보, 세무법인 급성장 의혹 “퇴직공직자로서 전관특혜 없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워크 2일차인 15일,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권오을 국가보훈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창군 이래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방위체제 아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정상은 2006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 원칙과 이행지침 등을 합의하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이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왼쪽부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명박 정부 들어 고조된 북한의 군사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 일자가 2015년 12월 1일로 조정됐으며, 지금까지도 전작권은 전환되지 않았다.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적절히 섞어 전력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내에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

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연내 원전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원을 무한히 소비만 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했던 권 후보자를 이른

바 ‘철새 정치인’이라며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통합민주당(소속)으로 의원이 되신 후 우리 당인 신한국당 쪽에 오셔서 3선까지 하셨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당(의원)이 국회의장일 때 장관급인 사무총장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장관 시켜준다니까 열른 나서게 되지 않았다. 대표적 ‘보은 인사’로 언론 등에서 얘기가 나온다”며 “시쳇말로 꿀벌린 데만 찾아 꿀 빼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짧게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세청 출신인 임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후 일했던 세무법인이 2년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이 ‘전관에 우’가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가 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1년9개월 동안 약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27배나 늘었다. 이 법인은 개업 9개월 만에 4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25억원에 달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55억3900만원까지 급증했다. 업계에서도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것”이라며 “저 말고 다른 구성원 분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매출 100억원) 기준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기존 매출이 합계되다 보니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퇴직 후 2024년 총선에 출마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하면서 지냈다. 제가 세무법인에서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사충실 의무확대·3%룰’ 상법개정안 의결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예정

李 대통령 “낭비성 예산 정비·조정
민생 경제 중심 효율적 예산안 편성”

이사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3%룰’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다.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3%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계

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정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처럼 쓰였던 예산을 점검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방청·기상청·산림청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림청 보고에서 공공일자리에 적정임금을 지급하

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당정,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7~8월)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일괄 지급 구간 확대로 전기요금 약 20% 할인

당정이 올해 역대급 폭염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2019년 여름철부터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확대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kWh 이상에서 451kWh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의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뉴스1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진 구간 확대로 전기요금 약 20% 할인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7월을 전후해 찾아온 폭염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맘때쯤 찾아오던 장마가 비교적 빠르게 찾아들면서 이른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장비구비가 점점 가벼워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